'親기업·親시장'… 경제 활성화 드라이브

■새정부 국정운영 기본 방향

성장과 분배 조화로 양극화 해소 제시

일방적으로 北 비위 맞추지는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당선 첫 일정으로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당선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가 밝힌 국정운영의 목표는 선진화와 신발전체제, 방법은 '화합 속의 변화'로 요약된다.

◇"일하는 매우 실용적 창조적 정부"=이 당선자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면서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진화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선진화를 '시대적 요구'로 규정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소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이 당선자는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신발전체제를 열어야 한다"고 말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양극화 극복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당선자는 '화합 속의 변화'를 통해 이 같은 목표달성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파 보수정권으로 권력이 넘어옴에 따라 일방적인 성장주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급진적인 '경제혁명'보다는 점진적인 '경제혁신'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변화 없이는 선진화도 신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 국운 상승의 새로운 변화를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드라이브 예고=대기업 CEO 출신인 이 당선자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주요 경제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면서 당장 인수위 발족과 함께 새 정부의 투자분위기 설명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해 인수위에 특별조직을 설치할 계획도 전했다.

◇"일방적 비위맞추기 안할 것"…대북정책 부분 수정 시사=이 당선자는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면서 새정부 대북정책의 방점을 북핵폐기에 찍었다.

이를 위해 그는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 적극 이행,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있는 설득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또 "북미회담에서 (북핵폐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대북인권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언급, 대북정책 기조의 부분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실용주의 외교"=이 당선자가 이날 회견을 통해 제시한 외교기조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를 모토로 하고 있다. 이는 외교에 있어서 만큼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뜻을 정치권에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자는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밝혀 신(新) 한미동맹 시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권인수작업 착수

"작고 실용적인 인수위 꾸리겠다"

盧대통령과 통화 "인수인계 협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17대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받아 법적으로 당선자 자격을 갖추게 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과 당선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순조로운 정권이양 방안 등에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정권 인수인계과정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당선자는 임기 말 국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을 갖고 국정현안 전반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팀', '4월 총선팀', '조각팀'으로 나눠 정권출범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는 이날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정치인은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벼운 실무자적 인수위를 꾸리겠다"며 큰 틀의 인수위 구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이미 인수위원장 인선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새 시대 인물' 취지에 맞게 비(非)정치인 가운데 박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과 박세일 서울대 교수, 윤여준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인 중에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 김형오 이재오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이 당선자는 22~25일 지방 모처에 머무르며 새 정부의 콘셉트를 포함한 정국 전반에 관한 구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새 정부 명칭으로는 '실용정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는 이날 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부시 대통령은 축하인사와 함께 이 당선자의 미국 방문 초청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대 쟁점 '이명박 특검법' 어떻게 될까

靑 "모두 털고 가야" 거부권 부정적

범여권 "한나라 대선 술책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대선 직후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고, 청와대도 당일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됐지만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것.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노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런 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며 "새 정권이 국민이 선택한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갈등을 없애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특검의 성립요건이었던 김경준씨가 스스로 말을 부인하고 있고 이미 통과된 특검 자체도 원천무효인 점이 있다"고 밝혔고, 박희태 상임고문도 CBS 라디오에 나와 "특검에 대해 국민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법률적으도 특검 수사로 인해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 당선자가 대선 전인 지난 16일 밤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거리가 있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대선 이후 조성된 상황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특검법은 애초 범여권의 대선전략 차원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더이상 정치적 효용을 기대할 수 없고, 새 정권 탄생 이후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국민적 화합에 진력해야 하는데 특검이 진행될 경우 자칫 국론분열이나 정쟁의 가능성만 높여 차기 정부 임기 초반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이 당선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 경우 여러 분야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할 정권 초기에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힐 수 있고, 이는 다가올 총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특검법 수용의사를 피력한데다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을 위해서나 의혹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나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모두 털고 가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특검을 통해 이 당선자의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나라당이 대선승리를 위해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했다는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신당 정성호 법률부대표는 "국민 대다수는 BBK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안됐다고 보고 있다"며 "사건의 진실을 계속 덮어 대통령 당선자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한나라당 말대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명쾌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 대통령 공직자 6천명 임면권

새 대통령의 선출은 정부내 최고인사권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공직사회 '파워엘리트'들의 인사권에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은 최소 6천개가 넘기 때문이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은 대통령에게 ▲내각 ▲헌법기관 ▲공공기관(옛 정부투자기관 등) ▲특정직(검사·경찰 고위직 등)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직속 위원회까지 감안하면 새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우선 행정부 내에서는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142개 자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이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국정원장 등과 각 부처 차관, 외청장 등이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부처 장관이 제청·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중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부처 장·차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여기에 3급 이상 공무원 1천822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다.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9명, 선관위원 3명 등 26명에 대해서도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장과 감사, 한국은행총재와 서울대학병원장 등 149개 자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밖에 고등검사장 등 검찰청과 경찰청의 고위간부들이 속해있는 특정직 4천여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중앙인사위원장, 공공기관장 등은 대체로 임기직이어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해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냐 '실용정부'냐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새 정부 명칭을 놓고 고민이 깊다.

한나라당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다. 일종의 '정권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 당선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 5번씩이나 이 표현을 썼다.

한 측근은 "이 당선자 본인이 '이명박 정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명칭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성격을 드러내는 핵심 키워드다.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어진 정부 명칭 관례를 따르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볼때는 일 잘하는 정부를 의미하는 '실용정부'가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이 당선자도 그동안 "국민성공시대를 여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겠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해 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